



SOC사업 분할 발주 논의 오인철(사진 왼쪽 두번째) 건설협회 도회장은 21일 최문순 지사를 방문해 SOC사업 분할 발주 및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지난 20일 진행한 '메르스 불황 극복 지역 경제살리기 캠페인'을 지속 추진을 약속했다. 하위윤기자

인사

◇강원도

▶과장급 전보·승진 △글로벌 투자동상국제교류과장 안진석 △보건복지여성국복지정책과장 박천수 △재난안전실방재과장 박대형 △총무행정관실2018동계조직위과장 박종열(승진) △농업기술원환경농업연구과장 김인종 △농식품연구소장 김상수(승진) △특화작물연구소장 최준근(△) △산채연구소장 홍대기(△) ▼담당급 전

보·승진 △대변인실 김병철 △감사관실 양원모 △총무행정관실복귀 김태영 △총무행정관실 윤인옥 △ 승영복 △기획조정실기획관실 정현환 △ 예산과 최우홍 △ 사회계과 정해섭 △ 균형발전과 민병도 △재난안전실방재과복귀 지기선 △경제진흥국경제정책과 박광용 △ 사회정책과 김창규 △ 전략산업과 황덕창 △ 전략산업과 안수동 △ 사회진출 △ 글로벌투자동상국투자유치과 박재 △ 통상지원과 우영석 △ 문화관광체육국관광개발과 홍영기 △ 문화예술과 박은주 △보건복지여성국여성성정선년가족과 전광포 △ 정해숙 △농정국농정과 송기동 △ 박순홍 △농식품국산립소득과 김복진 △ 환경과 김용수 △ 글로벌투자동상국투자유치과레고랜드추진단 최기철 △건설교통국지역도시과 송종석 △ 토지과 안광수 △ 치수와 이상범 △ 교통과박기 황성현 △등계유통국본부시설관리과 박유식 △의회사무처 장영식 △의회사무처 윤창호 △ 김명주 △농업기술원총무과 전창선 △서울본부 김미숙 △도립관리사업소관리과장 지승섭 △다열제트박물관 임태호 △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민속예술축전조직위과장 이명권 △총무행정관실강원도문화도민운동협의회 백승만 △경제진흥국경제정책과강원장조경제혁신센터 최중훈 △건설교통국토지과전입 이선종 △홍천군전출 김권중(승진) △

철원군 유홍 △농산물원중앙 김광선 △총무행정관실2018동계조직위과장 박병수 △보건복지여성국보건정책과전입 손태도 △농식품국수질보전과 권수안 △등계유통국본부상사시설과 유양섭 △감사관실 서인철 △재난안전실방재과성기준 △건설교통국지역도시과 최봉용 △ 도로철도과박귀 홍승표 △ 치수와 고규재 △등계유통국본부상사시설과 송삼규 △글로벌투자동상국투자유치과레고랜드추진단 조관목 △도로관리사업소북부지소장 박병승 △총무행정관실2018동계조직위과장 김태현 △건설교통국지역도시과국도교통부구역정전입 김중섭 △총무행정관실 이영호 △글로벌투자동상국기업지원과 신동진 △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 이삼석 △총무행정관실2018동계조직위과장 김순하 △건설교통국건축과국도교통부 김용수 △재난안전실안전총괄과 임광혁 △산립개발연구원임업연구

실장 김하선 △기획조정실균형발전과 임현식 △기획조정실기획관실 주남석(승진) △글로벌투자동상국기업지원과 염윤선(△) △국제교류과 박영민(△) △경제진흥국정보산업과 정관욱(△) △보건복지여성국식품의약과 김명희(△) △등계유통국본부시설관리과 김용문(△) △강원도립대학사무국 김동준(△) △환경농업본부기획총괄과 김규하(△) △ 해운항만과 전왕표(△) △자연환경연구공무원 박희지(△) △총무행정관실2018동계조직위과장 조규영(△) △총무행정관실2018동계조직위과장곽영준(△) △기획조정실예산과강원도개발공사과장 안중기(△) △글로벌투자동상국국제교류과강원컨벤션뷰로과장 홍관용(△) △인재개발원교육연구실 이종대 △경제진흥국정보산업과 탁연미(승진) △총무행정관실2018동계조직위과장 김원기(△) △등계유통국본부상사시설과 전건용(△) △경

제진흥국에너지과 고병만(△) △총무행정관실2018동계조직위과장 최종훈(△) △가족위생시험소 질병진단과장직무대리 정행준(△) △농정국농정과 정영모(△) △농업기술원미래농업교육원 김관용(△) △농식품국산립소득과 홍사은(△) △환경농업본부산정정책과 권용범(△) △내수연자원센터 김두수(△) △문화관광체육국체육과 손만식(△) △농식품국수질보전과 이정규(△) △서울본부 이영기(△) △도로관리사업소도로보수과장직무대리 정명구(△) △ 태백지소장 이혜교(△) △건설교통국건축과 정명수(△) △등계유통국본부상사시설과곽영준(△) △기획조정실예산과역정 이영훈(△) △재난안전실비상기획과 한승춘(△)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 하건수(△) △ 김시창(△) △산립개발연구원 이성재(△) △보건의환경연구원식품분석과장직무대리 정경진(△) ※속초시 인사명단은 강원일보 홈페이지(www.kwnews.co.kr) 참조.

도 국·과장급 이하 385명 승진·전보인사

도는 한만수 도의회 사무처장을 지방이사관으로 승진 발령하는 등 국·과장급 이하 385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22일자로 단행했다. ▶명단 15면

이지연 보건복지여성국장 직무대리는 국장으로 승진했다. 또 신설된 재난안전실장에는 조규석 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에는 조인묵 복지정책과

장이 각각 임명됐다.

이번 정기인사는 명예퇴직, 공로연수, 조직개편 및 기관 파견 등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인력난으로 실·국 주무과 등에서 20명의 결원이 발생했다. 도는 정원보다 적은 인원이 배치된 부서는 9월 공채합격자 발표 이후 조기 충원해준다는 방침이다. 이성현기자

“강원 업체 SOC 참여 확대”

오인철 건설협 도회장 지사 면담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장은 21일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방문하고 도내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 오 회장은 △도내 건설업체의 대형 국책사업 및 공공발주 SOC사업 참여 확대(수주율·하도급 참여비율 확대) △하도급 대금·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 정착 △건설사업 유공자 표창 확대 등을 건의했다.

특히 향후 국가 및 정부투자기관 발주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도내 업체의 최소 지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오인철 도회장은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건설산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준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장이 최문순 지사에게 SOC사업에 도내 업체 참여 확대 등을 건의했다.

강원경제 건설업이 이끈다 <2> 동계 특수

올림픽공사 ‘철새 경보’

외지업체 급증... 향토기업 보호 절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로 경기장과 진입도로 등 대회관련시설 건설에만 총 11조 879억원이 소요된다.

여기에 동계올림픽 특구 조성 사업에 3조3063억원, 원주-강릉 복선전철 사업 등 SOC건설 사업에 11조 430억원이 투입된다.

강원도 개청 이래 최대 건설 호재다. 동계올림픽 건설 분야에만 지금까지 체결된 공사 계약 금액은 3944억원이며 이 중 도내 업체들이 2112억원(53.5%)을 수주했다. 앞으로 700억~900억원 규모의 국제방송센터(IPC)와 메인프레스센터(MPC) 조성 사업도 남아있어 도내 업체들의 ‘동계 특수’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동계 특수’만을 노린 철새 업체들이 주소지만 옮겨 놓고 지역 업체에게 돌아갈 공사 수주 몫을 가로채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 종합건설

업체수는 2006년 1069곳에서 현재 606곳으로 40% 가량 줄었다.

반면 외지 업체들은 2006년 374곳이 강원도로 전입하는 등 매년 수십 곳의 외지업체들이 도내에서 공사를 수주하고 있다.

전문건설업체도 외지 업체에 대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2006년 1761곳인 전문건설업체수는 올해 1962곳으로 201곳이 증가했다. 전입업체 수는 2006년 176곳, 2007년 78곳, 지난해는 106곳으로 외지 업체들은 지역 의무 공동도급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도내 업체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구자열(원주·새정치민주연합) 도의원은 “원주-강릉 복선전철 전기공사에서 28개의 철새 업체들이 독식하려 한다”며 “동계올림픽이라는 특수상황을 보고 불과 몇 개월 전에 강원도로 이전, 낙찰받는 업체들에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은복 rio@kado.net

인사

강원도청 ◇4급 전보
△안진석(국제교류과장) △박전수(복지정책과장) △박태영(방재과장) △박종열(총무행정관실) △김인중(환경농업연구과장) △김상수(농식품연구소장) △최준근(특화작물연구소장) △홍대기(산채연구소장)

춘천경찰서 ◇경감
△박영찬 정문감사관실 부청문서관 △박은선 경무과 치안지도관 △김명수 소양로지구대장 △최종금 신사우파출소장 △김홍길 형사과 형사계장

원주경찰서 ◇경감
△박원철 112종합상황2팀장 △신건우 다목적기동순찰대장

한만수 처장 2급 승진 도, 국·과장 등 385명 인사

강원도는 21일 한만수(58·사진)도의회 사무처장을 지방이사관(2급)으로 승진발령하는 국·과장급과 담당급 이하 385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조규석 인재개발원장은 재난안전실장, 이지연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승진했다. 조인묵 복지정책과장은 인재개발원장으로 임명됐다.

백오인 105in@kado.net

▶ 인사명단 19면

‘신기술·특허공법’ 수의계약 ‘직접시공’ 때만 가능

(기술보유자)

조달청, 수의계약 가능한 신기술 적용 비중도 상향 조정

앞으로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에 대한 수의계약은 기술보유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신기술 적용기준도 강화돼 앞으로는 수의계약보다 경쟁입찰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달청장 김상규는 공사 수의계약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입찰참가자들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평가 기준’을 개정, 21일 수의계약 요청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 기준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라 신기술 등의 수의계약은 기술사용로 지급에 의한 기술지원만으로 실제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만큼 기술보유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신기술 등 보유업체가 실제로는 사용료만 받고 직접 시공을 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보니, 입찰참가

자들의 건전한 경쟁은 물론 업계의 신기술 개발 의욕을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신기술 등의 선정에 대해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수의계약 요청서를 5일 이상 사전 공개해 업계의 의견을 경청하도록 했다.

봉승권기자 skbang@

▶6면어 계속

1면서 계속 - ‘신기술·특허공법’ 수의계약 ‘직접시공’ 때만 가능

수의계약 적용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절차로, 굳이 수의계약으로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 공사라면 경쟁입찰 방식으로 집행하겠다는 뜻이다.

조달청은 또한 수의계약 적용이 가능한 공사 중 신기술 등이 차지하는 비율도 상향 조정해 경쟁입찰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종전까지는 전체 공사 중 신기술 등의 비중이 약 60% 이상이면 수의계약으로 집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70% 이상이 돼야 수의계약을 적용토록 한 것이다.

최용철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신기술

이나 특허사유의 수의계약이 이번 기준개정으로 상당부분 경쟁입찰로 전환될 것”이라며 “수요기관의 수의계약 요청서도 사전 공개해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의계약이 가능한 신기술은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비롯,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기술, 전력기술관리법(제6조의2)에 따른 기술 등을 가리킨다.

봉승권기자

“자격 갖춘 건설기술자끼리 명의대여 했더라도 처벌”

청주지법 판결

일정한 자격 기준을 갖춘 건설기술자라도 다른 사람의 명의로 공사를 했다면 명의 공여자와 함께 처벌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1년 8월께 A건설사는 충남의 공사현장이 잦은 설계변경으로 진척을 보이지 않자 현장 대리인이자 직원인 양모(45·건축분야 초급기술자)씨를 대신해 또 다른 직원 장모(48·건축분야 특급기술자)씨에게 공사 업무를 맡겼다.

이후부터 양씨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현장 방문, 서류나 회사 지시를 전달하는 역할만 했고 실제 현장의 공사 업무는 모두 장씨가 처리했다.

같은 시기 A건설사의 청주 공사현장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서류상 현장 대리인을 맡은 직원 유모

(80·건설분야 고급기술자)씨는 나이가 많아 공사 현장을 전혀 찾지 않았다.

이 때문에 또 다른 직원 김모(40·건설분야 초급기술자)씨가 유씨를 대신해 공사현장을 지휘했다.

이런 사실을 적발한 검찰은 이들을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건설기술자는 자기의 이름을 사용해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이를 수행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건설기술자 경력이 있는 피고인들은 신중한 검토를 통해 현장 대리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람이 현장에 투입돼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며 양씨 등 4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

했다.

양씨 등 4명은 모두 자격을 갖춘 건설기술자로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뿐이라는 취지로 즉각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21일 양씨 등 4명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설기술관리법의 관련 조항에서 말하는 ‘누구든지’에는 건설기술자 자격이 없는 사람은 물론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직원으로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는 점을 참작할 만하지만 건설업계의 관행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장(왼쪽)이 최문순 도지사를 만나 지역건설산업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오인철 건협 강원도회장

지역 경기활성화 행보 '눈길'

각계에 업계 현안 건의·전통시장 살리기 등 왕성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강원도 회장의 도내 경기활성화를 위한 왕성한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오인철 회장은 21일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예방하고 SOC(사회기반시설) 사업 관련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오 회장은 “평창동계올림픽 등으로 지역 내 대규모 공사가 발주되고 있지만 대부분 전국 발주가 되면서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가 많지 않다며 10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 분할발주를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최문순 지사는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는 곧 지역경제활성화로 이어진다”며 “지역업체들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화답했다.

앞서 오 회장은 지난 14일 손정철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을 만나 지역건설산업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지난 20일에는 강원도청 지역도시과 및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와 함께 정선군 임계5일장을 방문해 농특산품을 구입하고 메르스로 침해된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다.

지난달 말 제21대 건협 강원도회장으로 취임한 오 회장은 “앞으로도 주요 발주기관을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등 지역업체 및 회원사들이 더 많은 수주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회훈기자 hoony@

상반기 'SOC 재정 조기집행' 목표치에 겨우 턱걸이

(58.6%)

올 상반기 SOC(사회기반시설) 재정 조기 집행이 가까스로 목표치를 넘어섰다. 지난 5월까지만 해도 재정 집행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상반기 마지막 재정 집행에 열을 올린 결과 목표에 겨우 턱걸이했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 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토교통부의 재정 집행 실적은 22조4765억원으로 연간 계획38조4731억원의 58.4%를 집행했다.

국토부는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18조4352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재정 집행률이 47.9%에 머물렀다. 재정 집행률이 50%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22조4765억원 집행... 年 계획의 '58.4%' 그쳐 수공·한전 등 지난달 급증으로 그나마 달성

목표58.6%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지만 6월 한 달 동안 4조원이 넘는 재정을 집행하며 목표치에 바짝 다가섰다.

국토부의 다소 부진한 재정 집행률은 한 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공기관들이 데웠다.

수자원공사는 상반기 동안 연간 계획1조9759억원의 67.9%인 1조34109억원을 집행했다. 특히 지난달 전월1028억원) 대

비 5배가 넘는 554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30%선에 불과했던 재정 집행률을 한 달 만에 70% 가까이 끌어올렸다.

농어촌공사의 상반기 재정 집행 실적은 1조7477억원으로 연간 계획2조6133억원의 66.9%를 달성했다. 지난 5월까지 농어촌공사는 1조2507억원의 재정을 집행하며 재정 집행률이 47.9%에 그쳤지만 6월 들어 전월(1911억원) 대비 160.1% 증가한 4970억원을 한꺼번에 투입해 재정 집

행률을 20%포인트 가까이 높였다.

한전과 한수원은 상반기까지 각각 3조9947억원, 2조5466억원의 재정을 집행했다. 이는 연간 계획6조1215억원·3조1561억원의 65.3%, 65.1%로 지난 한 달 동안 한전은 전월5272억원)보다 132.8% 늘어난 1조2271억원을, 한수원은 전월3099억원) 대비 100.7% 증가한 6221억원을 투입한 영향이 컸다.

지난 5월 1065억원을 집행하는 데 그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우 6월에만 연간 계획(7조9787억원)의 30% 수준에 달하는 2조3316억원을 집행하며 재정집행률이 34.5%에서 63.7%로 크게 상승했다.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재정 집행 실적을 확대했지만 조기 집행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했다.

올 상반기 도로공사는 5047억원의 재정 집행 실적으로 연간 계획(3조3955억원)의 56.1%에 머물렀고 LH는 8조3785억원(51.6%)을 투입해 연간 계획(16조2400억원)의 절반을 살짝 웃돌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재정 조기 집행 목표달성을 위해 지난달 재정 투입을 큰 폭으로 늘린 것으로 보인다"며 "이월 불용 예산이 없도록 하반기에도 재정 집행을 점검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mp@

'잇단 유찰' 평창 올림픽플라자 조직위, 결국 건설업계에 SOS!

반복된 유찰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에 큰 우려를 낳았던 올림픽플라자(개·폐회식장) 건설공사가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전환돼 재추진된다.

대회조직위원회가 빠듯한 설계, 시공 일정을 맞추기 위해 건설업계에 SOS를 보내 건설사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본설계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대립산업과 공동으로 올림픽플라자 건설공사에 관한 기본설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일단 설계부터 진행한 후 공사비나 기간 등 세부 용역 결과에 따라 최종 시공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수의계약을 위한 전초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이 공사는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일원에 연면적 6만4800㎡ 규모의 개·폐회식장 및 홍보관 등을 신축하는 것으로 공사예산은 940억원 규모다.

빠듯한 설계·시공 일정에 대립산업과 TF 구성 기본설계부터 진행 사실상 수의계약 전환

애초 지난 6월 초 탄기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공고됐으나 재공고마저 유찰을 피하지 못했다.

당시 업계는 시공 환경이나 공기, 공사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적자시공을 피하기 어렵다며, 단 1개의 건설사(팀)도 참가의사를 밝히지 않아 거듭 유찰됐다.

이렇다 보니 정상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계획했던 2017년 9월 준공은 불투명해졌고, 추가 예산 확보가 불가능한 조직위로서는 또다시 유찰 위험을 감수하고 공고를 내기도 어려운 상황에 직

면했다.

조직위는 이에 따라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 결국 업계에 SOS를 보냈다.

앞서 입찰 과정에 단 1개사도 관심을 보이지 않아 곧바로 수의계약을 추진하기도 어려운 만큼, 건설사와 공동으로 기본설계부터 착수해 공기를 확보한 후 시공에 들어가기로 한 것이다.

조직위는 이를 위해 대립산업을 공동 기본설계자로 선정했고·곧바로 용역에 착수, 늦어도 오는 9월 하순까지는 설계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아직 대립산업과의 수의계약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재차 입찰을 집행하기도 어려워 사실상 대립산업이 시공을 맡게 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다만 공동 설계를 진행하더라도 주어진 공사비 내에서는 적정 실행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성공적인 시공 공사 및 대회 개최를 위한 고비는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봉승권기자 skbond@